



국내 은행의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

김명식 / 한국산업은행 북한·중국팀장

90년대 북한 경제 정책 변화의 제한성

김근식 /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김정일시대의 대외 개방 정책 촉진 및 억제 요인

신희선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국내 은행의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

김명식 / 한국산업은행 북한·중국팀장

남북한간 교류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지 약 15 년이 지난 현재, 교류는 다방면에 걸쳐 다양화되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간 교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간 실물 부문의 교류 협력 진전에 비추어 금융 부문의 교류 협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통일 독일의 사례가 우리의 통일 모델과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독일의 경우 통일 전후 구서독 은행에 의한 對구동독 지원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으며, 통일후 구서독 은행들은 구동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면, 통일전 구서독 은행들은 대월제도를 인정한 청산 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구 동서독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구서독 은행들은 구동독에 물품을 수출할 구서독 기업들에게 연불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구동독에 차관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구 동서독 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컸다. 통일 후에는 특히 대표적 개발 금융 기관인 독일재건은행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구동독 지역에 지원하여, 환경 개선·주택 현대화와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등 통일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극소화하였다.

우리 은행은 통일이 가시화되어야만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서독 은행처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은 남북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한 산업의 보완성을 극대화시키며 유희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남북한 상호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남북한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 정치·군사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실물 경제 교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은행들은 송금 등 대금 결제 기반을 구축, 대월제도를 인정한 청산 결제 방식 도입,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경제 협력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남북한간 협조융자제도와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다양한 금융 기법 활용이 필요하며, 이외에 남북한 민간 경제 교류 협력을 전담할 수 있도록 '북한산업개발기금(가칭)'을 별도 조성·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머리말

나 북한간 교류가 공식적으로 전개된 지 약 15년이 지난 현재, 교류 형태는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화되었으며 부문별 규모도 확대되었다. 남북한간 경제 교류 측면만 보더라도 매년 약 3억 달러 상당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교역 기반이 정착되었다. 경제 협력 면에서도 국내 여러 기업에 의한 공장이 북한에서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의 남북한간 경제 협력은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확대되어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한 신포지역의 경수로 건설과 1998년부터 이루어진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간 교류 협력 과정상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전의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이 단순히 제조업 중심에 의한 극히 제한적인 물자와 근로자의 운송 차원이 중심이었다면, 경수로 건설과 금강산 관광을 기점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은 물자, 대규모의 사람과 기술이 이동하는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북한 지역은 가고자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남북한 교류 활성화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고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에는 투자 보장, 물자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문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금 결제 구축과 원활한 자금 지원 기반 부족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에서 실물 부문의 발전·확대와는 달리 금융 부문에서의 교류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신포지역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이 이미 북한 지역에 진출해 있지만, 이는 우리 근로자의 생활비 송금 등으로 업무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금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남북한간 실물 부문의 교류 진전에 부응하여 금융 부문의 교류도 진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서독 은행들의 통일 전후 구동독에 대한 금융 지원 사례를 통해 대북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는 통일전 구서독 은행들이 구동독에 진출하고자 하는 구서독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실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구서독 은행에 의한 對구동독 자금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차피 구동독으로 지원된 자금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부분 구서독 기업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어, 구서독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택하였다.

통독 전후 구서독 은행의 역할

통일전 구서독 은행의 구동독 지원 내역¹⁾

구서독 정부는 구동독과의 통일전 경제협력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청산 계정을 이용한 대월제도, 對구동독 수출 금융 전담 회사를 통한 중장기 연불 수출 금융의 공여와 구 서독은행단에 의한 對구동독 상업 차관의 공여 형태 등을 통하여 구동독에 대한 일방적 시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청산 계정을 이용한 대월제도

1949년 10월 구 동서독 교역의 법적 기반이 된 프랑크푸르트협정 체결과 1951년 9월에 체결된 베를린협정에 의하여, 구 동서독 간의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따르는 대금 결제는 구서독의 독일연방은행과 구동독의 동독국립은행에 상호 개설된 청산 계정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졌다. 대금 결제 방식은 매 교역시 대금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대차 잔액만을 청산하는 차액 청산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일정한 신용 한도액 범위를 허용하는 청산계정대월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내독 거래의 청산결제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독특한 특혜 방식이었다.

〈표 1〉 구 동서독간 청산 계정 대월 한도와 구동독의 소진 실적

(단위: 백만 VE, %)

연도	대월 한도액(A)	구동독의 소진 실적(B)	소진율(B/A)
1955	100	52	52.0
1958	150	110	73.3
1960	200	104	52.0
1964	200	42	21.0
1970	440	387	88.0
1975	790	711	90.0
1980	850	745	87.6
1985	600	172	28.7
1988	850	265	31.2

자료: 독일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1990. 12), 「독일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1) 박유환(1997. 5),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 협력 방안」, 한국수출입은행과 독일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1990. 12), 「독일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참조.

○ 중장기 연불 수출 금융 제공

1960년 제2차베를린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 동서독간에 자본재의 장기공급협정 체결이 가능해지자, 구서독 정부는 1967년 3월에 對구동독 수출 자본재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동년 5월에는 산업금융회사(GEFI: Gesellschaft zur Finanzierung von Industrieanlagen mbH)를 설립하여 對구동독 수출 기업에 대한 연불 수출 금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회사는 구서독 기업의 구동독에 대한 수출 시, 구서독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아 수출액 상당액에 대해 중장기 신용을 제공하였다. 산업금융회사에 의한 연불 금융 지원은 구동독 기업이 구서독 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구동독 지역 내에 건설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활성화되었다.

○ 구 서독은행단의 對구동독 상업 차관 제공

통일전 구서독 은행들은 룩셈부르크, 런던, 파리 등에 소재한 그들의 자회사 또는 지점을 통해 재원을 마련, 국제은행컨소시엄을 이용하여 구동독에 대해 유로차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차관 제공은 1983년과 1984년에 이루어진 구서독 정부의 지급 보증에 의한 구 서독은행단의 차관 제공에 따라 準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상업 차관 공여는 구서독 독일 통일 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외화난에 시달린 구동독은 1982년 여름 구서독에 40억 마르크의 차관을 요청하였으며, 구서독 정부는 10억 마르크 규모의 5년 만기 차관의 정부 보증을 인수하였다. 또한 Bayerische Landesbank 주도 하의 차관공여은행단이 구서독 정부의 보증 하에 구동독

〈표 2〉 구서독의 對구동독 상업 차관 제공 내역

(단위: 억 마르크)

시기	도입 은행	공여 은행	규모	금리
1983. 7	동독대외결제은행	· 간사 은행: Bayerische Landesbank International SA · 참여 은행: 6 개 구서독 은행의 외국 현지 법인	5	리보+1%
1983. 7	상동	· 간사 은행 - 도이체방크의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 - Bayerische Landesbank International SA · 참여 은행: 17 개 구서독 은행의 외국 현지 법인	5	상동
1984. 7	상동	· 간사 은행: 도이체방크의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 · 참여 은행: 25 개 구서독 은행의 현지 법인	9.5	상동

자료: 박유한(1997. 5),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 협력 방안」.

의 독일대외결제은행(DABA)에게 1983년 7월 차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5억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다만, 이때 구서독 정부의 보증은 구동독 재무부의 신용 확보 약속에 따라 보증되어 구서독 국민의 조세 부담은 없었다. 아울러 1984년 7월에는 도이체방크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을 비롯한 25 개의 구서독 은행 현지 법인들이 구서독 정부의 지급 보증서를 받아 구동독의 독일대외결제은행에게 9억 5,000만 마르크의 중기 차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통일후 독일재건은행의 구동독 금융 지원

통독 직후 구서독 은행들은 구동독 지역에 1991년 말까지 점포를 약 1,259 개 설치하였으며, 일반 은행들의 구동독 지역 총여신 규모는 1992년 6월말 잔액 기준으로 900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대표적인 개발 금융 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이하 재건은행)은 통일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1990년부터 1996년간에 걸쳐 구동독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투자, 주택 현대화와 공공 부문 등 3 개 부문에 약 30여 종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점적

〈표 3〉 통일 이후 재건은행의 구동독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적(1990~ 96년)

구분	단위	1996	누계	비고
산업 투자				6만 개 기업 지원과 250만 명 고용 창출
대출 건수	건	8,400	101,600	
대출 금액	10억 마르크	5.3	47.6	
투자 금액	"	9.3	98.0	
주택 현대화				구동독 전체 주택의 42%인 290만 채 아파트 현대화(이 가운데 70만 채는 조립식)와 7만 채의 아파트 신축
대출 건수	건	54,100	562,500	
대출 금액	10억 마르크	8.5	49.9	
투자 금액	"	14.7	73.1	
공공 투자				주로 하수 처리와 댐·저수지 건설 등
대출 건수	건	200	3,900	
대출 금액	10억 마르크	0.6	8.3	
투자 금액	"	1.8	14.9	
합 계				
대출 건수	건	62,700	668,000	
대출 금액	10억 마르크	14.4	105.8	
투자 금액	"	25.8	186	

자료: KfW, Annual Report, 각년도.

으로 투자하였다. 동기간 동안 66만 8,000건에 1,058억 마르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구동독 지역에 총 1,860억 마르크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였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 투자 부문에 대하여 476억 마르크의 자금을 지원하여 980억 마르크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6만 개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2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주택 현대화 부문에서는 499억 마르크의 자금 지원으로 731억 마르크의 투자를 유발하여, 구동독 전체 주택의 42%인 290만 채의 아파트 현대화와 7만 채의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공공 투자 부문에서는 83억 마르크를 지원하여 149억 마르크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였다. 이 공공 투자 부문 자금은 하수 처리와 댐·저수지 건설 등 약 3,900 건의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었다.

재건은행의 자금 지원 방식은 전통적으로 독특하여 투자가인 기업체에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고 상업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건은행은 상업은행과 협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협조융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투자 가치와 지원의 우선 순위는 재건은행이 담당하고, 신용 상태나 담보 능력 등 지원 상의 제반 기술적 문제는 상업은행이 담당함으로써 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국내 은행의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송금 등 대금 결제 구축 방안

○ 송금 등 대금 결제상 문제점

자금 결제에는 청산 결제 방식과 환결제 방식이 있으며, 환결제 방식은 다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한 방식, 추심(Collection)에 의한 방식, 송금환(Remittance)에 의한 결제 방식 등으로 나뉜다.

현재 남북한간 물품 대금 결제는 주로 중개인을 통한 간접 결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L/C를 개설하는 방법은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국 등지의 중개인을 통한 간접 결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무역권한을 수출입 회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중개상이 同수출입 회사를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계약액의 3% 이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중개인을 통한 간접 결제 방식 가운데 L/C 방식보다 T/T 송금 방식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상사의 제3국 은행 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 인부에게 지급할 노임 등을 일본의 족리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처럼 남북한간에는 공식적인 대금결제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송금마저 원활하고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 송금과 대금 결제 기반 구축 방안

• 송금 등 대금 결제 기반 구축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의 진전에 맞추어 금융 부문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가 대금 결제 기반 구축이다. 투자해야 할 자금을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송금해야 하는 기반 구축없이 사업의 원활화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금과 결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남북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은행간 환거래 계약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 은행들의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은행들과 환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 은행들과의 환거래를 추진하여, 이들 은행들과 북한 은행들과의 환거래를 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안이나, 북한내 외국과의 합작 은행 등과 환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이다. 장기적으로 북한 은행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남북한 은행간 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청산 결제에 의한 대월제도 도입

현재 남북한간 경제 교류는 남한 기업에 의한 반출이 주가 되는 현상인 바, 이는 북한내 반출할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의 반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남북한간 임가공 품목을 제외한 남북한 순수한 품목간 경제 교류는 정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한간 경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줄 필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반입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대월제도를 인정한 청산 결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남북한간 경제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금융 부문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산 결제에 의한 대월제도 방식은 국가간에 외화나 금을 주고받지 않고 통상 및 지불협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에 수출입하는 상품을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화폐로 계산한 후 구좌를 통하여 청산하는 방법이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

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청산 결제 방식의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8항).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 즉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 통화 선정, 청산 계정의 범위와 결산, 대월제도 등 대금 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합의된 상태에 있다.

남북한간 청산 결제 방식은 굳이 구 동서독 은행간 청산결제은행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남북한간 보안, 자금 결제의 효율성과 자금 결제에 있어서 남한측에 의한 대월제도 등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끼리의 청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북한의 경우 조선무역은행이 대외 금융 부문의 자금 결제 전담 은행임을 고려하여, 남한의 중앙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간 청산 결제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자금 지원 방안

○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확대

통일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외화난이 심각한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측에 의한 일방적 시혜 성격의 자금 지원은 불가피하다.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 기업의 대북한 진출이 주축이 되는 경제 교류 협력은 불가피

하며 이러한 와중에 우리 기업의 손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있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동기금은 북한과의 교류 전반에 걸친 자금 지원의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 교류 협력에서도 대북 식량이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 등 공공 성격의 경험 자문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 추진에는 사용할 여지가 별로 크지 않다.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은 남북한 산업의 보완성을 극대화하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유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며 남북한간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확대시켜 전쟁 억제 효과를 제고하는 등 공헌도가 참으로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폭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국책 은행의 우대 조건에 의한 여신 확대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만 가지고는 대북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닌 국책 은행에 의한 자금 지원책을 별도로 강구

〈표 4〉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199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 원)

연도	항목	금액
1991	세계 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164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786
	쌀 직교역 손실 보전(천지무역)	1,268
	소계	2,218
1992	8·15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사업 준비금 보전	551
1995	대북 쌀 15만 톤 지원	185,435
1996	대북 기상 장비 지원	40
	유엔 기구 제2차 대북 지원 사업 참여(WFP)	2,435
	대북 경수로 사업 사전 용역비 지원(KEDO)	4,882
	소계	7,357
1997	유엔 기구 제3차 대북 지원 사업 참여(WFP, UNDP 등)	5,374
	대북 탈수 방지약 공장 복구 지원(UNICEF)	304
	유엔 제3차 대북 지원 사업 추가 참여(WFP 등)	19,223
	소계	24,901
1998	대북 경수로 사업 초기 사업비 대출	67,523
	유엔 기구 제4차 대북 지원 사업 참여	14,108
	남북공동사진전 소요 경비 일부 지원	30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13
	소계	81,674
합계		302,136

자료: 통일부, 「98 통일백서」.

해야 할 것이다. 국책 은행은 북한에 진출하려 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 가운데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우대 금리와 양호한 상환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특수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여신 규정' (가칭)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同규정에는 활용 자금의 한도는 물론 자금 용도 등을 명확히 하는 대신에 우대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과 정부의 재정에서 반분하는 식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출과 관련하여 북한에 진출하고

자 하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직접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외국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국내 은행이나 국내 은행의 해외 현지 법인이 보증을 함으로써 자금 차입의 원활화를 기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자금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同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만 국한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수법이라 할 수 있다.²⁾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법을 적용하여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은 국제적 신용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많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긴 하지만, 일단 성공한다면 상당한 이익이 기대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同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현대그룹이 북한의 서해안에 약 2,000만 평의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최소한 100억 달러에 상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³⁾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북한이라는 매우 위험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서해안공단 사업은 사업 주체자에게는 물론이고 남북한 경험에서도 일대 전환기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인 만큼, 현대그룹의 기대대로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은행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인 현대그룹의 입장에서는 ① 사업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② 새로운 자금 조달원의 개발에 의한 부채 수용 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③ 자금 지원에 따른 그에 상당한 담보 제공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등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의 투자에 따른 토지·공장 물건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同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금융 지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⁴⁾

○ 협조용자제도에 의한 금융 지원

국내 은행들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시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여신 자금의 원활한 회수에 있으나, 국내 은행들이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자금 지원시 국내 공장 물건 등에 담보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북한 공장의 가동 여부 또한 매우 궁급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국내 은행들이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는 싶지만 담보 문제나 공장의 원활한 가동 여

2) 반기로(1998),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pp. 24~25.

3) 「한국경제신문」(1999. 5.18).

4) 대북 진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자금 지원 검토시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박원일(1999. 5), "대북 투자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자 유치 방안",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pp. 47~48 참조.

부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내 은행의 북한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내 신뢰도 높은 외국 합작 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同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체의 사업성 검토는 물론 여신 심사와 담보권 행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되 북한내 외국 합작 은행에게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위 독일재건은행식의 협조융자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차주는 북한에 있는 막대한 공장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국내 은행 입장에서는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였지만 同기업의 영업 상황 등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북한에 있는 외국 합작 은행으로서는 자기 자금이 소요되지 않고도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협조융자제도는 차주, 국내 은행과 북한내 외국 합작 은행 상호간 상당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남북한간 협조융자제도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국내 은행이 북한에 설치될 대규모의 공장 물건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실행한 다음, 북한내 담보 물건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또는 나름대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 방안은 북한 기관에게는 담보 관리 수수료 수입을 제공하고, 국내 은행으로서는 북한내 공장 물건에 관한 담보 관리 문제를 해소하며, 차입자로서는 북한내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손실 보전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통일 독일의 사례가 우리의 통일 모델과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나, 통일 전후 구서독 은행들의 對구동독 자금 지원 사례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통일전 대월제도를 인정한 청산 결제 방식이나 연불 수출 금융 지원과 구서독 은행에 의한 對구동독 차관 제공 등은 구 동서독간의 상호 신뢰를 더욱 제고시킴으로써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통일 후에는 특히 구서독 개발 금융 기관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한 주택 현대화, 환경 개선, 중소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구동독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은 통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그나마 완화시켰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비하여 남북한간 금융 부문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통일이 되거나 가시화되어야만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은 남북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한 산업의 보완성을 극대화시키며 유희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남북한 상호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남북한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 정치·군사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현 상태에서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나,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이를 짧은 시간에 조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경제 협력이 지연될수록 통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며 비용은 더욱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전에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이 아쉽다.

실물 부문의 진전은 금융 부문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금융 부문의 남북한간 실물 경제 교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은행들은 송금 등 자금 결제 기반을 구축하고 대월제도를 인정한 청산 결제 방식을 도입함과 아울러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경제 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동기금이 남북한 전반적인 교류 지원이라는 대단히 포괄적인 대상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남북한 민간 경제 교류 협력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책 은행으로 하여금 '북한산업개발기금(가칭)'을 별도 조성·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물과 금융 부문간의 교류 협력이 결국은 남북한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통일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향후 이룩될 통일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이제는 금융 부문에 의한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은행의 대북한 진출을 통한 우리 기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사업성 검토와 자금 지원이 실현되는 등 완벽한 금융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 **9**